

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박희승 · 권칠승  
김정호 · 김남희 · 정을호  
이정문 · 허종식 · 김윤덕  
이인영 · 이연희 · 윤후덕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.

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%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,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,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하지만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

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,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후단 신설,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).

#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평가”를 “평가·해산”으로 한다.

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정한다) 및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한다.

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어린이집 운영 법인”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

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및 제5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4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)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잔여재산 처분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 
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산인가를  
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<후단 신설>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이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정한다) 및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한다.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어린이



이집 운영 법인”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및 제5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

<신 설>

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
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4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) ① 어린이집 운영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어린이집 운영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

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